

연구실안전법제10차개정 내용 및 연구실안전 전관리위원회 내용

안전보호기술지원팀

CONTENTS

- 1. 연구실안전법제 10차 개정
- 2.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및 역할



제10차 연구실안전법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

- ✓ 연구실 안전법 구조 및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 도입 등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10차 법률 개정’ 추진으로 기관 자율 안전관리 수준 제고 및 법 이해도 제고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의원 발의: '17.10.19]

개정 주요 내용

1. 연구실 안전법의 구조 및 체계 개선 (전부 개정)
2. 기관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 ‘공표’ 제도 도입)
3.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 구축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등)
4. 점검·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5. 연구현장 부담 완화
6. ‘전문자격 제도’ 신설

주요내용_1. 연구실안전법전부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법령에 대한 현장 인지도 및 이해 부족
 - 법 이행사항 미준수 사유의 약 40%가 '법 인지 부족'
- 복잡한 법률 구조·체계
 - 잦은 법 개정(일부개정 5회, 타법개정 4회)으로 인한 법률 구조·체계 복잡

제1장 : 8개 조항
제2장 : 20개 조항
제3장 : 4개 조항
제4장 : 4개 조항



<규율 균형성 및 조문 배치 적절성 ↓> <조문 간 논리적 연관성 ↓, 가지 조문 ↑>

- 다양한 법 해석으로 인한 현장 혼란
 - '연구개발활동', '연구실 사고' 등의 정의 및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여 현장 혼란 및 법 적용 논란 초래

법 개정 방안

법 전부개정을 통한 법 구조·체계 개선

현행

- ① 총칙
- ② 연구실 안전조치
- ③ 보칙
- ④ 벌칙

4장 36개 조문

개정후

- ① 총칙
- ②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 ③ 연구실 안전조치
- ④ 연구실 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 ⑤ 연구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 ⑥ 연구실안전관리사
- ⑦ 보칙
- ⑧ 벌칙

8장 45개 조문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정비

- 연구개발활동(실험·실습 포함) 등 정의 신설 및 연구활동사고 (연구실 외 사고 포함), 연구활동종사자(책임자 포함) 등 정의 정비

법 적용 대상 정비

주요내용_2. 기관상위관리자안전의식제고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에 대한 상위관리자의 낮은 관심도

- 기관장, 교수 등 기관 상위관리자가 연구개발 성과 치중, 안전에 낮은 가치 부여

•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 (1위) 상위 관리자 안전인식 전환(38.1%)

현장 목소리

“연구실 안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체의 장’ 관심과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17.9월, 수도권 안전환경관리자 세미나)



■ 안전관리비 미확보 및 부적절 사용 사례 등 발생

법 개정 방안

■ ‘안전정보 공표제도’ 도입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연구실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공표



■ ‘안전관리비’ 미확보 및 부적절 사용 제제강화

주요내용_3. 기관자율적안전관리기반구축

현황및문제점

■ 정부의 일괄적 관리·감독 한계

- 방대한 법 대상 기관 (4,661개 기관, 69,119개 연구실)
- 다양한 기관 특성 및 연구환경, 연구실 위험요소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

- 기관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미구성 기관 약 37 %

■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기관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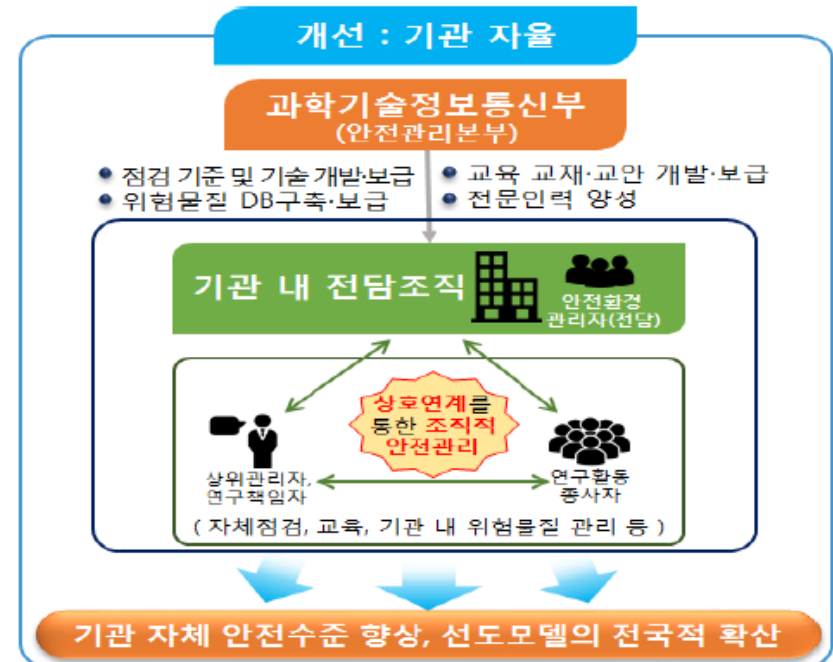
- 전담 조직 및 인력 보유 기관('16년) : 14%(조직), 30%(인력)

법개정방안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유도를 위해 기관 자체 안전관리 협의체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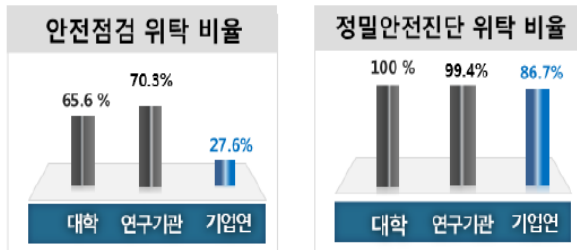
■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 지원



주요내용_4. 점검및진단대행기관관리강화

현황및문제점

■ 점검·진단 위탁 실시 비율 증가



■ 일부 대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불성실 점검·진단

- 미등록 인원의 점검·진단 수행 등 부실 점검·진단 사례 등 적발

현장 목소리

“일부 대행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불성실한 점검 진단으로 인해 점검·진단 제도의 실효성이 우려됨” (‘17년 교육 및 법제도 설명회, 안전관리자 세미나 등)



■ 대행기관 제재조치 ‘등록취소’가 유일

법 개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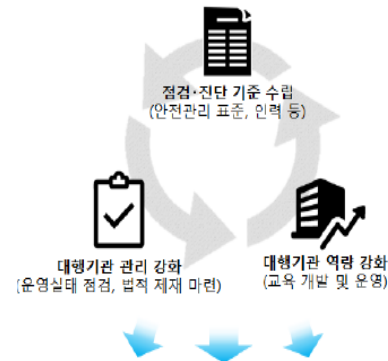
부적절 대행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

- 업무 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

점검·진단 세부기준 마련 → 객관성 향상

- 안전관리 등급 산정기준, 기술인력 투입 기준 등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한 점검·진단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대행기관 ‘교육’ 및 ‘운영실태 점검’ 강화



주요내용_5. 연구현장 부담완화

현황및문제점

■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 불만

- 법 인지·이해 부족(법 대상 연구실 미인지 등)으로 인한 법 이행사항 미준수
→ 과태료 부과로 현장 불만

■ 시정명령 조항 미비

- 현행법에 명시된 시정명령은 점검, 진단 조항에 국한

■ 저위험 연구실(수학과 등) 동일 규제 적용

- 연구활동 특징, 취급 유해인자 등에 따라 연구실의 위험 수준이 상이하나,
각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 타 법률과의 중복 적용

- 부처(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개별적 안전관리로 인한 중복 점검·진단 등
연구현장 부담 가중

법개정방안

■ 시정명령 대상 확대

- 시정명령 대상을 확대 규정(신규제도, 판단 모호 사항 등)하고 시정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현장 부담 완화 도모

■ 저위험 연구실 규제 합리화

- 저위험 연구실 판단기준(취급 유해인자 등) 및 범위 검토
- 저위험 연구실에 대한 법적 규제(교육, 점검·진단 등) 완화 등 합리적 규제
적용방안 검토

■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중복규제 완화

- 타 법률과의 유사 제도 발굴·검토 및 부처 협의를 통한 중복규제(화관법
정기검사 등) 완화

주요내용_6. ‘전문자격제도’ 신설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 인력 부족

- 전문적 연구실 안전관리, 효율적 정책 이행 등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부족

< 기관별 잠재 위험요소 파악·관리 시 가장 필요한 사항 >

구 분	2010년	2012년	2016년
대학	전문인력(55.6%)	전문인력(58%)	전문인력(41.7%)
연구기관	전문인력(43.5%)	전문인력(53%)	전문인력(47.2%)
기업(연)	전문교육(57.1%)	전문교육(46.5%)	전문교육(54.5%)

※ 출처 : 각 연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 연구실 안전 전문자격 제도 부재

- 타 안전관련 법령에서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자격 제도(소방시설 관리자 등) 운영
- 타 안전(산업안전 등) 자격 취득자 또는 안전관리 실무경력자 중심으로 기관 안전관리가 이루어져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직무 전문성 부족 문제 발생

※ 기관 내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자격 현황

- 산업안전 등 유사자격 취득자 : 25.4%
- 무자격, 비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 74.6%

법 개정 방안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 신설

- 연구실 안전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

※ 연구실 안전법 개정(안)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 제34조 연구실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 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제36조 결격사유
- 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38조 자격의 취소·정지

국가자격제도 신설을 통한 인재양성

배경 및 필요성

연구실 안전 특성과 전문인력 육성 미흡
별도의 자격증 없이 일정 정도의 실무경력을 인정
전문성 확보 및 적정 자격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 수준의 질적 성장 필요



과제 추진방향

법령 개정을 통한 자격제도 신설

자격제도 운영체계 구축 및 시험 시행

목표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법제6조관련]

-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의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권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요건]

- 법률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
 1.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① 연구실책임자 ② 연구활동종사자 ③ 연구실안전관리비 편성 부의서 장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4. 연구활동종사자가 위원회 구성 과반수($1/2$) 이상 포함 되어야 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법제6조관련]

-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의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권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회 운영]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 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
- 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시
-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 회의결과: 의결된 내용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법제6조관련]

- ✓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의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권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협의사항]

- 법률 제6조에 따름

- | | |
|---------------------|-----------------------------|
|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 2.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
| 3.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

[제외조문(시행령 별표1)]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시 연구실안전법 제6조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 제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시 위의 연구실 안전 관련 주요 협의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